

-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 토 론 회 개 요 >

- (때 · 곳) 2020. 12. 22(화) 14:00 ~16:00/ 충청남도의회 112호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오인철 의원)
- (대 상) 2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의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3
③ 패널 · 청중토론	7
④ 마무리 말씀	9
III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9
IV .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통해 충남의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방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 12. 22.(화), 14:00~16:00 / 충청남도의회 112호
 - 참 석 : 2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의원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충남의 노후된 공동주택의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충남 도민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점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였으며,
- 15년 이상된 충청남도 공동주택의 현황을 점검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충남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방향 설정과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함.

- 50%가 넘는 충남도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앞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및 등 충청남도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김미영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관리소장)

- 충남 도민들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체의 55%에 해당하고 충남도내 15년 이상된 아파트 중 관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는 총 11만호로 아파트 호수 대비 24.8%를 차지하고 있음.
-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지표면 밑이나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등 대부분 콘크리트 저수조로 청소나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염두해 두지 않고 설치되어 저수조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충남에 설치된 승강기 총 3.2만대 중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이 30%로 0.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1천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는 총 570대로, 2016년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된 승강기는 1년에 1번 정기검사,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됨.

- 하지만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에 대해서 현재 관리방안으로 모니터링 외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에 달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어 제도적인 정착은 이루어졌으나 재정적 지원은 너무도 미비한 상황임.
- 이젠 노후된 공동주택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 전문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

[2] 지정토론(5인)

① 배장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사무국장)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드는 비용이 1대당 약 10만~30만원으로 이와 별개로 부속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 하지만 승강기 1대당 교체비용이 5천여 만원으로 그 비용이 상당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 것은 영세한 공동주택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안산시, 고양시, 평택시, 성남시, 안양시, 서울노원구, 제주도는 조례에서 노후승강기 교체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충남 계룡시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 3억 3천만원 중 승강기 교체시 공사비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 공동주택 승강기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② 신동희 (천안시 주택과 주무관)

- 천안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56%가 15년 이상된 아파트임.
- 천안시는 2020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보수·보강지원사업을 단지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였고, 기존의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수시책사업일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천안시는 공동주택활성화 및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항상 노력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각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다른 시군에 전파하여 아파트에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③ 김홍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장)

- 저수조 관리보다는 수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음.

- 올 여름 수돗물 깔따구 유충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됨. 수돗물의 오염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상수 원수의 오염으로 발생하고, 2차적으로는 급배수 과정 및 오래된 저수조 등에서 오염이 일어나고 있음
-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연 1회 이상 수돗물 수질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음
- 기존에 구축된 관거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교체하여 오염원을 없앨 수 있으나, 공동주택 시설안에 들어와 있는 관거들은 그에 대한 교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이 발생하기도 함.
- 세종시의 경우 이번달에 상수도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면서 적정 잔류염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새로 생긴 도시의 경우는 세종시처럼 관리가 가능하나 이미 모든 관로가 구축된 도시에서는 배수지 확충을 통한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직결급수방식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 대전시, 김해시 등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④ 박철휘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수조, 승강기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대상 측면에서 살펴 보겠음.
- 저수조 위생점검 상의 기준 10개 항목 중 저수조와 관련된 것은 5개 항목으로 나머지 항목은 저수조 주변 환경 및 수질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부항목이 O,X로 되어 있지만 세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적부가 달라질 수 있어 판단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공동주택의 저수조와 승강기가 공공자산이 아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지원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수선이 아닌 관리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의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임
 - 이 경우엔 사유재산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⑤ 운영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 충남도내 공동주택단지가 1,228개이고,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은 33%로 410개 단지에 해당됨.
- 이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느 특정 아파트만을 지정하여 현안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으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젠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장기수선충당 계획수립을 하여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소적립으로 공동주택 저수조나 승강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임.

-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 계획수립이 의무규정이 아님.
- 현재 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1명으로 1,228개단지를 혼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또한 지원에 관하여 연립 및 다세대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상의 한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도 적극 공감함.
- 본래 제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3] 패널·청중토론

- 제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옳으나, 과장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충남도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의견 : 김미영 직산부영아파트 관리소장]

- 처음에 준공권자가 장기수선충당계획서를 주는데 매우 성의가 없음. 준공권자가 도면, 장충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면 그대로 적립할텐데,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

[질문 : 이태섭/ 주공아파트 관리소장]

-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시군에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계도할 예정이고, 국토부 산하에 중앙공동주택 관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계획 컨설팅을 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 건립시 이 컨설팅을 받도록 제도화시킬 예정임.

[답변 : 윤영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 준공권자가 장기수선충당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최소 적립금액을 공문으로 고지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과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길을 보수해 주는 마음으로 승강기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

[질문 : 배장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사무국장]

-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해서 장충금이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윤영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 공공지원과 관련되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토지 효율적인 측면과 에너지 효율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를 생각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과 장기수선충당계획서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

[의견 : 박철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충남도에도 도입하면 투명한 공동주택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의견 : 신동희, 천안시 주택과 주무관]

- 좋은 제도이면 언제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할 것임.

[답변 : 윤영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4 마무리 말씀

- 한꺼번에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치로 알고 있고,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서로 상의하여 충청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음.

[마무리발언 :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공동주택 저수조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충청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장기수선충당계획의 올바른 수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 여력이 없는 영세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방안 마련 필요.

<결 과>

- 법적(조례)으로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 장기수선충당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제안.
-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한계가 있는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방안 마련 제안.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도의원간의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30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25건	
1	뉴시스	충남도의회, 공공주택 주거안전 개선대책 모색	'20.12.22
2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3	충청일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4	세계타임즈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5	충청메시지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6	충청데일리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7	굿뉴스365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8	충청탑뉴스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9	뉴스앤충청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0	특급뉴스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1	온양신문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2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3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4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15	C뉴스041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방안 의정토론회	"
16	국제뉴스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의정토론회	"

17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방안 모색	〃
18	뉴스클릭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방안 모색	〃
19	내외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모색	〃
20	아시아투데이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모색	〃
21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22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23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24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 의정토론회...민관 함께 노후 공동주택 개선책	〃
25	뉴스밴드	오인철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민관 함께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모색	〃
지면보도		5건	
26	충청투데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머리 맞대	'20.12.23 정치05면
27	충청신문	충남 오래된 아파트 안전관리 '빨간불'	'20.12.23 종합03면
28	대전투데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20.12.23 정치02면
29	중앙매일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20.12.23 종합15면
30	투데이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모색	'20.12.23 종합02면

2020년 12월 23일 (수)

충청투데이

정치 05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머리 맞대

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미영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관리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배장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사무국장, 윤영산 충남도 건축도시과장, 신동희 천안시 주택과 주무관, 김홍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영 소장은 "도내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체의 47.5%인 22만 1000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4.7%인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이상 공동주택을 사적영역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방안을 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112 X 129 mm

충청신문

“충남 오래된 아파트 안전관리 ‘빨간불’”

오인철 도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2일 공동주택 주거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사진)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영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

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111 X 155 mm

대전투데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오인철 도의원 요청 의정토론회…민관 함께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모색



충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주거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정환 사무국장, 천

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대에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환기자

149 X 146 mm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오인철 도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천안 직산부영 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사무국장, 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천수 기자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모색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
저수조 관리 및 승강기 교체, 지자체 지원 시급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사무국장, 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운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 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공동주택 안전관리 의정 토론회 기념사진

충남도의회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 의원은 "더이상 공동주택을 사적영역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방안을 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도의회 제 311·32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먹물 관리와 승강기 안전문제 개선을 주제로 도지사에게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내포/이예슬 기자

236 X 177 mm

□ 인터넷뉴스 (25건)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오인철 충남도의원 요청 의정토론회...민관 함께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모색-

충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주거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사무국장, 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라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 의원은 “더이상 공동주택을 사적영역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방안을 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도의회 제311·32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먹는물 관리와 승강기 안전문제 개선을 주제로 도지사에게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